

국제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미국, EU, 일본, 한국의 통상 정책의 특징 및 수단의 차이에 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the Recent International Commercial Policies among the USA, EU, Japan, and Korea

변재웅(Jae-Woong BYUN)*

요 약 (ABSTRACT)

최근 WTO 체제의 출범, 지역주의 확산 등으로 국제통상환경은 변화하고 있으며, 각국의 통상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미국, EU, 일본의 통상정책은 한국을 비롯한 국제통상환경 전반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것은 주요국의 통상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미국, EU, 일본, 한국의 통상정책과 수단의 특징을 비교·분석하였는데, 각국 통상정책의 다양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Key Word : 국제통상정책, 통상정책수단, 비관세장벽

<목 차>

<p>I. 서론</p> <p>II. 미국의 통상정책</p> <p>1. 미국 통상정책의 목표</p> <p>2. 미국 통상정책의 특징</p> <p>3. 미국 통상정책 수단의 특징</p> <p>III. EU의 통상정책</p> <p>1. EU 통상정책의 목표</p> <p>2. EU 통상정책의 특징</p> <p>3. EU 통상정책 수단의 특징</p> <p>IV. 일본의 통상정책</p>	<p>1. 일본 통상정책의 목표</p> <p>2. 일본 통상정책의 특징</p> <p>3. 일본 통상정책 수단의 특징</p> <p>V. 한국의 통상정책</p> <p>1. 한국 통상정책의 목표</p> <p>2. 한국 통상정책의 특징</p> <p>3. 한국 통상정책 수단의 특징</p> <p>VI. 결론</p> <p>※ 참고문헌</p>
---	--

I. 서론

*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일국의 통상정책은 대외 경제정책의 일부로서 외국과의 교역활동을 규제하는 제한 정부 시책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상정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고용증진, 산업발전, 국제 수지균형 등을 통하여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무역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각국 정부는 국제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교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개입을 하고 있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불공정 무역거래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그에 따른 국가간 무역마찰도 빈번하다. 하지만 국제 통상정책은 합의 논리에 의하여 주로 미국과 EU 등의 선진국에 의해서 그 방향이 결정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한편 세계경제는 상호의존도가 심화되고, 생산의 국제화 추세가 확대됨에 따라 개별국가의 국내규범에 따른 자율적인 통상정책의 변화는 과거와는 달리 교역상대 국가들에게 매우 민감한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WTO의 뉴라운드 추진을 통한 자국 관심분야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나 기업이 대안을 마련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선진국, 특히 미국, EU 그리고 일본의 관련 통상정책 및 제도의 이해와 연구인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국, EU, 일본, 한국의 통상정책과 수단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각국의 최근 통상정책의 특징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II. 미국의 통상정책

1. 미국 통상정책의 목표

미국 통상정책의 목표는 "해외시장에서 불공정하고 보호주의적인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하는 한편"¹⁾ "무역장벽의 감축과 그로 인한 국제무역의 확대를 통하여 경제성장 및 고용기회의 확충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 이는 미국 통상정책의 목표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경제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통상이익 확보를 위한 정책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해외시장 개방압력의 강화, 슈퍼 301조 등의 일방적 무역정책수단의 사용,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확대, 신통상의제 해결을 위한 뉴라운드 추진, 그리고 다자주의, 지역주의, 쌍무주의 등을 동시에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비교우위산업인 금융, 보험, 통신 등의 서비스산업과 지적재산권 보호, 농산품에 대한 다자간 혹은 쌍무간 협상을 신축적으로 사용하여 외국시장의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외국의 불공정무역이 자국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1) GATT (1990), p. 20.

2) GATT (1994). Vol. II, p. 11.

무역과 연계된 환경, 투자, 노동, 경쟁정책,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의 새로운 통상의제들을 다자간 통상협상에서 국제규범을 마련함으로써 미국의 의지대로 통상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2. 미국 통상정책의 특징

최근 미국통상정책의 특징은 외국 시장개방 압력의 강화, 수출촉진 정책의 추진, 통상협정 이행 감시정책 추구,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확대, 신통상 의제 및 라운드의 추진, 그리고 의회중심형 통상정책의 결정 등이라 할 수 있다.³⁾(표-1 참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 시장개방 압력의 강화이다. 미국은 다자주의, 지역주의, 그리고 쌍무주의를 적절히 병행하여 실질적인 해외시장 개방을 유도하는 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시장개방압력은 특정분야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시장개방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통상압력은 주로 미국의 관심분야, 즉 지적재산권, 서비스, 농산물 등 다양한 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며, 선진국에 대해서는 통상협력을 강화하고, 신흥공업국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압력을 추진하고 있다.

<표 - 1> 미국, EU, 일본, 한국의 통상정책 특징 비교

	미 국	EU	일 본	한 국
통상정책의 유형	의회 중심형	절충형	전문관료 중심형	외교통상형 (행정부 중심)
통상정책의 주요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시장 개방 압력 강화 (대선 진국 협력 강화 및 신흥공업국에 대한 추가 개방 압력) ○ 수출촉진정책 추진 ○ 통상협정이행 감시정책 추구 ○ 다자주의, 지역주의, 쌍무주의 병행 추진 (지역 무역협정 체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통상정책 운용(역내 장벽 완화 및 역외 장벽유지) ○ 차별주의 및 선별주의 정책 유지 (개도국에 다양한 특혜무역협정 제공, 쌍무적·부문별 협상 선호) ○ 개방주의 및 보호주의 정책 병행 ○ 지역협력체와의 협력 강화 ○ 상호주의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경분리 원칙 하의 산업정책 위주의 통상 정책 추구 ○ 실리주의 정책 (소극적 시장 개방 및 적극적 해외시장 개척 정책) ○ 비공식 민관 협조체계 유지 ○ 구조적 무역장벽 유지 및 비관세장벽의 선호 ○ 상호주의보다 다자주의 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환경변화에 따른 방어적 대처 ○ 수출촉진, 수입 규제 및 국내 산업 보호정책 추진 - 다자간 협상 수동적 참여 (1960-70년대) ○ 외국의 개방압력에 따른 시장 개방, 자유화 추진 - 소극적 통상 정책 (1980년대)

3) Cohen 외 (1996), 변재용 (1997), 왕윤중 (1997), 윤기관 외 (1998), 재정공론사 (1996), 정문중 (1994) 참조.

<표 - 1> 미국, EU, 일본, 한국의 통상정책 특징 비교

	미 국	EU	일 본	한 국
통상정책의 주요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통상분야 (노동, 환경, 경쟁,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기타 서비스 및 지적 재산권 분야 등)의 입장 강화 및 규범화 추진 ○ 공정무역, 상호주의의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화, 자유화의 추진. 다자간, 지역간 협상 적극참여 - 적극적 통상정책 추구 (1990년대)

둘째, 수출촉진 정책의 추진을 들 수 있다. 미국은 수출촉진을 위해 1993년 이후 매년 국가수출전략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미국수출증진의 핵심전략은 거대신통시장(Big Emerging Markets: BEMs)의 무한한 성장가능성과 고도성장을 적극 활용하여 일본과 EU 등에 의해 잠식되었던 미국의 해외시장 점유율을 회복시켜 나가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셋째, 통상협정 이행 감시정책 추구이다. 미국은 수출확대를 위한 통상협정과 아울러 이미 체결된 협정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통상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96년 초 미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무역협정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고 무역협정과 미 통상법에 근거한 미국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USTR내에 무역협정 감시 및 강화기구(Monitoring Enforcement Unit: MEU)를 설치하였다.⁴⁾ MEU의 역할은 기존 협정에 대한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연례 국별무역보고서를 준비하며, 슈퍼 301조 및 스페셜 301조의 적용대상국을 지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1996년 7월에는 외국의 무역협정이행 및 해외시장의 무역장벽발굴 등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무부 국제무역실(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ITA)내에 무역협정이행센터(Trade Compliance Center: TCC)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⁵⁾

넷째,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확대이다. 미국은 수출촉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역무역협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NAFTA의 확대, 미주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FATT) 형성의 가속화,⁶⁾ APEC의 적극적인 주도 등이 자유무역정

4) USTR은 매년 외국의 무역장벽과 관행을 평가한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를 발간하고 있다.

5) TCC와 USTR은 통상현안에 있어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지만 그 조직에 있어 서로 다른 임무와 법적 권한을 지니고 있다. USTR은 통상협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이를 통하여 타국의 시장 개방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TCC는 광범위한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을 통하여 USTR의 활동 결과가 미국 기업의 시장개발 기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6) 최근 지역협정 중 미국은 쿠바를 제외한 미주 34개 국가들을 2005년까지 하나의 거대 경제권으로 형성하는 미주 자유무역지대를 추진하고 있다.

책의 중심이 되고 있다. 미국은 또한 태평양, 미주, 서대양지역 및 EU와 경제협력 강화도 모색하고 있다.

다섯째, 신통상 의제 및 라운드의 추진이다. 미국은 지역통상협정 확대와 함께 최근에는 WTO, OECD 등 다자간 협력체를 통하여 환경, 투자, 노동기준, 경쟁정책, 전자상거래, 정부조달의 투명성 등과 관련된 이른바 '신통상의제'의 조기타결을 위해 WTO와 OECD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외국의 불공정무역이 자국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무역과 연계된 새로운 통상의제들을 다자간 통상협상에서 국제규범을 마련함으로써 미국의 의지되로 통상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여섯째, 의회중심형 통상정책의 결정이다. 미국의 통상정책의 규제에 권한은 의회에 있다. 이는 타국과 비교하여 통상결정에서 미국 의회의 역할이 지대함을 알 수 있다. 미국 의회는 통상정책의 수행과 통상문제에 관한 외국과의 협상권은 행정부에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의회는 행정부의 통상정책 수립과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입법과정에서 통상정책 결정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통상결정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미무역위원회(USITC)와 미무역대표부(USTR)는 의회와 행정부의 상호견제와 균형에서 생겨난 제도적 방안이다. 또한 민간업계는 의회와의 로비와 행정부와의 접촉을 통해 그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⁷⁾

3. 미국 통상정책 수단의 특징

미국은 통상정책상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출입 및 생산관련 통상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법조문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다.⁸⁾ 통상정책 수단으로는 관세 관련조치, 수입수량제한조치, 수출자유규제협정이나 시장질서협정과 같은 회색조치(Grey Area Measures), 반덤핑제도, 상계관세제도, 일방적 통상정책수단인 301조 등도 포함되고 있다. 최근 미국 통상정책 수단의 변화와 불공정 무역제재 수단의 특징에 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최근 통상정책 수단 사용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1980년대 까지 수출자유규제(VERs), 물량규제, 시장질서협정(OMAs) 등 다양한 수입규제를 사용하였으나,⁹⁾ 1990년대 이후 WTO 규범하에 인정되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원산지규정 강화 등의 수입규제를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⁰⁾ 미국은 또한 특정국가 및 특정품목을 대상으로 하여 수출금지 혹은 수출통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¹¹⁾

7) 배용호 (1997) p. 3., 미국학연구소 (1995).

8) 김기수 (1996) pp. 152-158.

9) 이러한 미국의 VERs, OMAs, 물량규제 등은 국제무역법규를 위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상대방 국가와 자발적인 협정을 체결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10) 왕윤중 (1997) p. 75.

11) 미국은 쿠바, 이라크, 북한, 리비아, 그리고 유고연방에 대해서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정부는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들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고 있

미국의 통상정책 수단 중 가장 큰 특징은 국내법의 적용에 의해 일방적 무역규제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1974년 통상법 301조를 제정하여 일방적 무역제제조치를 합리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외국의 무역장벽과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함으로써 미국상품의 수출을 위한 해외시장 개방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USTR가 교역상대국과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협상을 하고 이 협상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 불공정 무역관행에 의해 피해를 받은 만큼 일방적으로 보복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¹²⁾

한편 슈퍼 301조는 1988년 종합무역법 제 1302조에 의하여 개정된 1974년 통상법 제 310조를 지칭하는 것으로,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USTR가 교역상대국의 광범위한 무역관행을 연례적으로 조사하여 우선협상대상국 및 관행 지정을 규정하고 있어 일반 301조보다 더욱 강화되었다.¹³⁾

슈퍼 301조가 기존의 301조 보다 강화된 점과 그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 일반 301조는 이해관계자의 제소가 있는 경우 USTR의 판단에 의해 조사가 개시되는 소극적인 면이 있는 반면, 슈퍼 301조는 조사개시를 정해진 기일내에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일반 301조는 제소된 개별품목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되는 반면, 슈퍼 301조에서는 우선협상국과 우선협상대상관행 지정을 통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상대국의 제도 또는 구조적 관행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슈퍼 301조는 지속적인 일반 301조와는 달리 1989-90년, 1994년 그리고 최근 1999년에 새롭게 부활한 한시적인 법률이다.

미국은 또한 일방적 무역규제 수단으로 1988년 종합무역법에 근거하여 특정국가의 불공정 행위, 정책이나 관행에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슈퍼 301조와는 다른 특별히 통신부문과 지적재산권의 특정분야를 목표로 스페셜 301조도 도입했다.¹⁴⁾ 스페셜 301조는 또한 지정철회제도와 한시적인 법률인 슈퍼 301조와는 달리 지정철회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며 지속적인 법률이라는 점에서 슈퍼 301조와는 차이가 있다. 슈퍼 301

다. 1979년 무역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상무부의 수출관리국이 수출통제의 시행 권한을 가지고 있다. 김기수 (1996) p. 180.

- 12)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조치를 규정한 일련의 조항을 '미국 통상법 제 301조'라고 지칭하는데, 관련 규정은 1988년 종합통상경쟁력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에 의해 더욱 광범위하게 개정되었고 '슈퍼 301조'와 '스페셜 301조'가 신설되었다. 법무부 (1996) p. 479.
- 13) 슈퍼 301조에 따르면 USTR은 매년 외국의 무역장벽과 관행을 적시한 보고서(NTE 보고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보고서 제출후 30일 이내에 우선협상국(Priority Foreign Countries)과 그 나라의 우선 협상대상관행(Priority Foreign Practices)을 지정하고, 우선협상국 지정 후 21일 이내에 반드시 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결과에 불만족할 경우 미국내법에 의해 일방적 무역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무부 (1996).
- 14) 스페셜 301조는 미 무역대표부의 연례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가 발표된 이후 30일 이내에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보호를 부인하거나, 공정하고 공평한 시장 접근을 부인하는 국가를 파악, 지적재산권 보호가 극히 미비된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하고,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감시대상국(Watch List) 등으로 분류하여 USTR은 일방적 무역조치를 위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법무부 (1996).

조나 스페셜 301조는 외국의 무역관행까지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국제통상규범에 위반된다는 비판이 있다.¹⁵⁾

II. EU의 통상정책

1. EU 통상정책의 목표

EU의 통상정책은 ECSC조약(1951년), EEC조약(1957년), 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 1986년), 그리고 유럽연합조약(The Treaty of European Union, 1991년) 등을 통해 발전하였다. 공동통상정책은 1957년에 체결된 로마조약인 EEC조약 제110-제116조에 그 법적인 기초를 두고 있는데, 특히 제111조는 과도기간까지의 통상정책을 제113조는 과도기간후(1970년 이후)의 공동통상정책의 실시를 각각 명시하고 있다.¹⁶⁾

EU 통상정책의 목표는 EEC조약(1957년) 제110조에 나타나고 있다. “조화로운 세계무역 발전과 국제무역에서의 무역제한조치의 점진적인 철폐와 관세장벽의 인하에 기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113조는 무역방어적 조항인 역내산업보호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어, EU의 통상정책의 목표는 기본적으로는 자유무역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보호무역주의적 색채가 공존함을 알 수 있다.

2. EU 통상정책의 특징

EU 통상정책의 특징은 공동통상정책의 시행, 다양한 특혜무역협정과 차별적 역외무역정책 수행, 비관세장벽의 선호, 지역협력체와의 협력 강화, 상호주의의 강조 등이 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통상정책의 시행이다. EU는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경제통합의 일환으로 역외국가에 대한 회원국들의 대외통상관련 조치의 통일화를 통한 공동통상정책(Common Commercial Policy)의 수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U 회원국은 현실적으로 독자적인 통상정책도 적용하고 있으나, EU의 대외통상정책은 원칙적으로는 공동통상정책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둘째, 다양한 무역특혜협정 체결 및 차별적 역외통상정책 수행이다. EU는 과거 식민지 국가, 지정학적 혹은 정치적 관계에 따라 다양한 무역특혜협정을 체결하고 교역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EU 가입을 희망하는 동구국가, EFTA 잔여국, 아프리카, 카리브 및 태평양(ACP) 연안국가, 지중해 연안국가 등에 대한 다양한 GSP 부여 등의 특혜

15) 서정두 (1996) p. 300.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에 관한 일련의 보복조항인) 301조는 그 타겟이 된 국가들로부터 301조가 적법성의 결여와 무법적 일방주의의 전형이라는 비판도 있다. 법무부 (1996) p. 480.

16) 제113조는 관세를 수정, 역외관세를 결정, 관세협정 및 통상협정 체결, 수출정책, 반덤핑 및 보조금에 대한 통일규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정이나 혹은 특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역외 국가에 대해서는 차별적 무역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

셋째, 지역협력체와의 협력 강화이다. EU는 그동안 가장 진보된 형태의 공동체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다른 지역공동체나 역외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EU는 NATFA, APEC 등의 지역협력체에 대응하기 위하여 쌍무적 혹은 지역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1996년 한국, 중국, 일본, ASEAN 회원국 및 EU 회원국이 참여하는 ASEM을 창설하여 경제, 통상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북아프리카 및 중동국가와 함께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추진하고, 미국과 남미의 경제공동체인 MERCOSUR와 각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넷째로, EU의 대외통상정책의 특징중 하나는 상호주의 원칙의 고수이다. 이는 교역상대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간 이익과 기회의 균등을 기본으로 시장개방을 추진한다는 것이다.¹⁷⁾ 즉, EU가 역외국가에 제공한 수준만큼 우대와 시장개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EU의 상호주의는 보호무역주의적 성격도 내포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1988-1991년 사이 EU는 한국과의 지적재산권 분쟁으로 한국에 부여한 GSP 제도를 일시 정지하고 한국시장의 개방을 추진한 적이 있었다.¹⁸⁾

3. EU 통상정책 수단의 특징

EU는 관세장벽보다는 반덤핑제도, 까다로운 원산지규정의 적용, 수입수량조치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활용하는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¹⁹⁾ 최근 EU 통상정책 수단 중 가장 빈번히 사용하는 것 중 하나는 반덤핑제도의 강화와 이의 활용이다.²⁰⁾ EU는 WTO 체제의 출범에 따라 자국의 특정산업이 무한경쟁에 노출되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각종 수입규제 조치를 적용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중 반덤핑 관세부과를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표 - 2> 미국과 EU의 일방적 무역규제 수단의 비교

	통상법 301조 (미국) (수퍼301조, 스페셜 301조 포함)	통상장벽 신규칙(NBR) (EU) (EU Reg. 3286/94)
목적	○ 제3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통상정책의 방지를 위한 일종의 보복 통상수단 (미국 : 외국의 무역장벽과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함으로써 미국상품의 수출을 위한 해외시장 개방 추구 및 무역적자 해소 목적)	

17) "The Commission reserves the right to make access to the benefits of 1992 for non-member countries' firms, conditional upon a guarantee of similar opportunities (or at least non-discriminatory opportunities) in those firms' own countries". EC Commission (1988b).

18) 변재웅 (1998).

19) EU를 포함한 선진국들은 다양한 비관세를 활용하여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ird and Yeats (1990), Salvatore (ed.) (1993), 한홍렬 (인터넷 자료, 1996).

20) 변재웅 (1998), 홍성화, 정영진 (1997a), 홍성화, 정영진 (1997b), 정의광 (1998).

<표 - 2> 미국과 EU의 일방적 무역규제 수단의 비교

목적	(EU : 제3국에 의한 통상장벽으로 인하여 공동체내에서 피해가 야기되거나 혹은 제3국 시장내에서 공동체 기업에 대한 불리한 통상효과를 제거함으로써 EU의 완전한 권리행사 확보를 위한 이중의 목적)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야 등 전분야에 대한 불공정 통상 관행, 부정적인 무역장벽을 가진다고 판단되는 제3국의 모든 통상관행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일방적 통상수단 ○ 체소자격: 기업, 산업, 정부 모두에게 부여 ○ 보복수단: 양허조치 유해 및 철회, 관세인상, 수량규제 등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제3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국내법에 의해 일방적인 무역제제를 가하는 일종의 통상무기로 제3국에 대해 암묵적인 강제력을 행사 ○ 수퍼 301조 : 전분야 ○ 스페셜 301 : 지적재산권 분야 ○ 국제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하지 않음 ○ 필요시 수시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통상정책수단(NCPI, EU Reg. 2641/84)을 1984년 처음 채택 ○ NCPI는 통상장벽신규칙(NBR, EU Reg. 3286/94)에 의해 수정·보완 (개정이유 : 제3 국의 통상장벽의 유효한 대처, WTO 범위내 인정된 국제통상규칙에 의해 EU 권리 행사의 보장을 위해서) ○ 특정조치의 채택은 국제규범(WTO)의 분쟁해결절차를 거친후 시행되도록 명시되어 있어 미국 통상법 301조와 차이 ○ 현실적 적용상 문제점 및 한계성으로 공동체 산업계에 의하여 거의 이용되지 않음

EU의 반덤핑법의 특징은 역내 생산보호를 목적으로 한 신보호주의적 규제성격과 정치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U의 반덤핑법은 반덤핑 절차를 엄격한 사법절차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피해마진제도와 공동체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어 덤핑대상국의 가격인상의 약속에 의하여 반덤핑 조사 절차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유연성을 갖고 있다. 또한 반덤핑의 집행에 있어서도 회원국의 개별적 이해를 반영하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²¹⁾

둘째, EU는 회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수량제한, 수출자율규제 및 쿼터제 등 다양한 수량제한 조치와 긴급수입제한 조치 및 각종 기술 및 표준화 정책을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판정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인 판단의 소지가 높은 원산지 규정과 이에 연관된 단순조립규정(Screwdriver Regulation)을 강화하여 EU 산업의 보호주의적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²²⁾

셋째, EU 통상정책수단 중에서 역외국가들의 불공정 무역에 보다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목적으로 미국의 통상법 301조와 유사한 무역장벽수단(Trade Barriers Instrument: TBI)이 있다.(표-2 참조) EU는 1984년 신통상정책수단(New Commercial Policy Instrument

21) 홍성화, 정영진 (1997a).

22) 변재웅 (1998).

: NCPI, EU Reg. 2641/84)을 채택하여, 역외국의 불법적인 통상관행이 EU산업에 중대한 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을 가져오는 경우나 제3국 시장에서 EU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경우에 발동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NCPI는 통상장벽신규칙(New Trade Barriers Regulation: NBR, EU Reg. 3286/94)에 의해 수정·보완되었다.²³⁾ 특정조치의 채택은 국제규범 특히 GATT나 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거친 후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일방적이 조치가 가능한 301조와 차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미국의 301조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의 <표 - 2>는 미국과 EU의 일방적 불공정 무역규제수단의 특징과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IV. 일본의 통상정책

1. 일본 통상정책의 목표

일본의 통상정책은 일본의 산업정책과 깊은 연관이 있다. 전후 일본의 통상정책은 산업의 부흥을 위한 경제자립기반의 확보였으며, 이는 '국제수지의 균형', '수출에 의한 수입대금의 충당', '경제성장에 필요한 공업원료와 해외시장의 확보'라는 세 가지 기본목표에 의한 강력한 수출지원과 이중적 관세 및 다양한 비관세장벽 유지를 통해 수입규제를 효율화함으로써 수입억제정책을 구축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일본통상정책의 기본이 되었으며, 일본 국내시장의 폐쇄성을 형성해온 주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은 1970-80년대 막대한 무역흑자와 일본 국내시장의 개방요구에 따른 외국과의 무역마찰의 원인이기도 하였다.²⁴⁾ 결국 일본 통상정책의 목표는 국내시장개방의 소극적 대처와 해외시장의 적극적 개척을 통한 국내산업의 보호 및 육성이라는 '실리추구형 통상산업정책의 효율화 혹은 극대화'로 해석할 수 있겠다.

2. 일본 통상정책의 특징

일본 통상정책의 특징은 전문관료 중심의 통상정책결정, 긴밀한 민관협력체제의 구축, 산업정책 우위의 통상정책 추진, 배타적 비관세 장벽 및 구조적 무역장벽 유지, 다자간 협력강화 및 다자주의를 통한 문제 해결 등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은 정책과정과 결정에 있어서 행정부, 특히 전문관료가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관료 중심적 정책결정 메커니즘 및 긴밀한 관료협조체제로 통상정책은 국내산업정책과의 연계 하에 비교적 효율적으로 추진된다.²⁵⁾

23) 채형복 (1998).

24) 이종훈 (1996) pp. 128-131., 윤기관 외 (1998) pp. 250-254., 박종수 (1997) pp. 98-99.

25) 이호철 (1996a), 이호철 (1996b).

다음은 비공식적 채널을 통한 민관협력체제의 구축이다. 일본의 통상정책은 정부와 회의의 긴밀한 협조하에 입안되고 실행되면서, 그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부문간에는 자문기구들을 통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자문기구들은 소비자보다는 생산자와 무역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향이 있으며, 민관의 관계는 상당히 비공식적이면서도 일본 특유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비공식적 채널을 통한 통상정책의 결정과 시행이 일본시장을 상당히 폐쇄적으로 만든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²⁶⁾

셋째, 일본은 정경분리 원칙 하에 산업정책에 우위를 둔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경제의 부흥기에 강력한 수출지원과 수입억제정책을 구축하였고, 이것이 오늘날 일본통상정책의 기본이 되었다. 그 결과 일본의 통상정책은 국내 시장보호라는 소극적 자세를 취하는 등 산업정책에 우위를 둔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일본은 또한 이중적 통상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일본은 자국의 산업구조조정을 위해서 보조금 지급 등 상당히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실시하기도 했지만,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쌍무적인 협상을 통해 수출자율규제를 유도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본 통상정책의 이중성을 잘 보여 주는 사례이다. 또한 무역마찰 해소를 위해 선별적인 시장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최근 자국의 시장개방에 대해 상호주의적 조치는 피하고 다자주의를 통해 통상문제의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외적으로는 자유무역체제를 표방하면서도 자국 시장개방에 있어서는 외부의 통상압력에 맞추어 소극적, 형식적으로 추진되며, 선진국과의 통상마찰은 다자주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3. 일본 통상정책 수단의 특징

일본통상정책 수단의 특징은 이중적 관세구조 유지, 수출자율규제의 적극적 활용, 배타적 비관세제도의 유지, 구조적인 무역장벽의 유지라고 할 수 있다.(표-3 참조) 첫째, 일본은 이중적 관세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관세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지만,²⁷⁾ 일부 품목은 고관세(Peak Tariff)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구조는 선진국보다는 중진국 및 개발도상국에 불리한 구조여서 일본의 통상정책의도를 드러내는 일면이라 할 수 있다.²⁸⁾ 또한 제품에 따라서 자의적인 관세분류틀 함으로써, 수입금지 또는 고관세 부과 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통관절차를 까다롭게 적용하여, 특정제도의 대상이 되는 제품에 대해서 수입승인을 요하고 있다.

둘째, 일본은 수출자율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수입수량규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심한 편이 아니지만, 수출물량을 제한하는 수출자율규제를 다른 국가

26) 강인수 외 (1998) pp. 419-420.

27) 일본은 평균 양허관세율을 UR 이전의 3.9%에서 WTO출범시 1.7%로 낮추었고, 무관세 비중도 35%에서 71%로 늘렸다.

28) UR 타결 후 일본의 평균관세율은 공산품의 경우 1.7%로 인하되었지만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5.6%의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에 비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²⁹⁾ 또한 일본은 지속적인 무역흑자로 인해 타국과의 통상마찰이 심화되자, 일방적 무역보복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쌍무적 협상을 통해 수출자유규제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무역마찰문제를 해결해 왔다. 이처럼 통상마찰을 해결하기 위해 실용적인 해결책에 자주 의존함으로써 일본이 오히려 회색지대조치(Grey Area Measures) 확대에 기여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표 - 3> 미국, EU, 일본, 한국의 통상정책 수단 비교

	미 국	E U	일 본	한 국
주요 통상정책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관련조치(관세, 할당관세, GSP, 원산지 규정) ○ 수입수량제한조치(수입금지, 201조(Safeguard), 수입쿼타, 국가안보를 위한 수입규제) ○ 회색조치(수출자유규제협정, 시장질서유지 협정) ○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 337조 ○ 수출금지 및 수출통제, 수출진흥 프로그램, 301 조 및 연관조치 ○ 무역조정지원프로그램 및 기타생산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공동관세 및 GSP의 시행) ○ 수입수량규제 및 VERs (반덤핑 조치를 무역정책 수단으로 사용) ○ 반덤핑, 상계관세 ○ 긴급수입제한조치 ○ 무역관련 공동농업 정책 ○ 서비스교역 관련 정책 ○ 무역관련 표준화 정책(역내 교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조화 및 표준 관련 규정을 제정 및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정책(선진국 보다는 개발도상국에 불리한 구조 유지) ○ 수량제한조치(무역마찰해결 수단으로 적극활용) ○ 기타 비관세장벽(비가시적인 비관세제도 적극 사용 : 수입승인제도, 수입확인제도, 수입보고제도, 사후심사제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관련 제도(수량규제, 수입절차, 관세, 통관절차, 표준 및 기술규정, 원산지규정, 정부조달) ○ 공정 및 불공정 관련 제도(반덤핑조치, 세이프가드, 보조금 및 상계조치 관련제도) ○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제도 및 서비스시장 관련제도
일방적 무역규제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법 301조(외국의 무역장벽과 불공정 무역관행을 제거를 위해 법제화함) ○ 슈퍼 301조(통상법 301조와 동일하며 보다 강화 됨) ○ 스페셜 301조(지적재산권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CPI(신통상방어 정책) - 불공정 무역관행 및 부정적 무역 효과 제거 ○ NBR(통상장벽에 대한 신규칙) - NCPI를 수정· 보완 및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의적(상황에 따른 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의적(상황에 따른 대처)
성격	매우 공격적	공격적	방어적(개도국에 대해서는 공격적)	방어적

29) 이러한 수출자유규제는 수출물량감소로 인한 지대를 전부 수출국이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가장 피해가 적은 무역마찰 해결 수단이었다.

셋째, 일본은 배타적 비관세제도를 유지하고 있다.³⁰⁾ 일본의 경우 관세정책이나 수량제한조치보다는 비관세정책을 통상정책의 실질적인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전반적인 일본의 비관세제도의 특징은 미국, EU의 상계관세, 반덤핑부과 등 관세나 기타 가격 메카니즘을 이용한 수입규제를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수량할당(수출자율규제), 수입허가제도³¹⁾ 등의 직접적인 양적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산업보호, 유망산업육성 등의 산업정책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밖에도 엄격한 행정지도, 규격 및 검사제도, 기준인증제도, 정부조달에서의 차별 등의 간접적인 수입규제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³²⁾

일본은 또한 구조적인 무역장벽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계열관계, 배타적 거래관행, 가격 메커니즘, 저축·투자 패턴, 토지의 이용, 복잡한 유통 시스템, 기업관행 등의 구조적 무역장벽이 존재한다. 이러한 구조적 무역장벽이 직·간접적으로 일본의 통상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반대로 통상정책의 집행 결과 이러한 구조적 무역장벽이 한층 강화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일본통상정책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³³⁾

V. 한국의 통상정책

1. 한국 통상정책의 목표

한국 통상정책의 목표는 <표 - 4>에서 알 수 있듯이 시대별로 변화하였다. WTO 출범 이후 한국 통상정책은 세계경제 통합이 심화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통상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 기본방향은 '개방된 통상국가' 지향이다. 한국의 통상정책의 목표는 외교통상부의 중장기 통상정책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의 개방을 추구함으로써 세계경제 질서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대내적으로는 자유경쟁, 공정성, 형평성에 바탕을 둔 경제구조의 개혁을 수행하려고 한다.

<표 - 4> 한국 통상정책의 시대별 변화 추이

	1950년대	1960 -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통상정책 기 조	의자유입	무역확대	개방화 및 자유화	다자주의 추구

30) Steven (1990), 한홍렬 (인터넷 자료, 1996).

31) 수입승인제도, 수입확인제도, 특수결제제도, 수입보고제도, 사후심사제도 등의 적용 과정에서 복잡한 제도와 서류제출 요구 및 행정지도로 인해 수입을 억제, 지연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비관세장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Steven (1990).

32) 이종훈 (1996) pp. 135-137., Steven (1990), p. 15.

33) 강인수 (1998) p. 421.

<표 - 4> 한국 통상정책의 시대별 변화 추이

	1950년대	1960 -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통상정책 기본방향 : 국가이익 조정전략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외자도입 -수입을 위한 수출 -원조자금의 확보	○중상주의적 정책 기조 -경쟁위주의 통상 정책 -수출지원 및 수입 규제 정책	○자유무역정책으 로 전환을 모색 -통상마찰 심각화 -소극적 통상정책	○상호이익이 되는 positive-sum 전략 추진 -개방과 자유화 기조 유지 -국제적 정책 조정
통상정책 세부방향	○자원수출을 통한 소요외자 확보 ○생필품 수입확대 ○다자협상에 무관 심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전략 추진 ○수입규제 및 국내 산업보호 정책 추진 ○다자협상에 수동 적 참여	○무역확대에 관 심 -수입의 긍정적 측면 인식 ○통상마찰 해소 에 초점 -시장개방확대 ○APEC에 참여 -양자협상에 치중	○무역의 확대 균형 -수출과 투자를 통한 IMF 체제 극복 ○외국인투자 등 산업협력 활성화 도모 ○다자 및 지역 협상 에 적극적 참여

자료: 외교통상부 (1998. 12), "중장기 통상정책"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한국의 통상정책의 목표는 첫째, 선·후진국간, 한국 주변 국가간 통상조정자 역할을 지향하는 통상정책, 대내 개방 및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지향하는 통상정책, 시장경제질서에 근거하는 통상정책, 세계의 모든 시장을 중시하는 전방위적인 통상정책 추구라고 할 수 있다.³⁴⁾

2. 한국 통상정책의 특징

한국 통상정책의 특징은 시기별로 다르다. 한국의 통상정책은 1960년대 이래 경제발전의 주된 수단이었던 수출위주의 무역정책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표4 참조). 따라서 한국의 통상정책은 이러한 무역확대형 산업구조적 특징,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그리고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쌍무간 혹은 다자간 통상관계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한국의 통상정책의 시대별 특징을 살펴보면, 1970년대는 공업화의 추진과정에서 수반된 수출촉진 및 수입대체정책, 오일쇼크, 그리고 중화학공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인한 경제의 조정국면 등으로 인해 수입자유화 정책기조가 단속적으로 중단되고 보호주의적 정책이

34)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통상정책의 기본방향은 국민의 이해와 합의에 기초한 통상정책, 거시적인 국가무역이익에 입각한 거시적 통상정책의 수립,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개방적 정책 지향,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정책 수혜자 관점에서 통상이익을 고려하는 통상정책 운용,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통상정책 운용, 통상정책의 수립 집행에 있어 사전준비와 사후관리, 새로운 차원의 통상접근 전략 추구, 그리고 통상인프라 강화와 통상정책관련 정보의 공유 체계 확립이다. 외교통상부(1998. 12), "중장기 통상정책".

강화되었던 것이 특징이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물량위주의 수출로 인한 통상마찰과 소극적 통상정책의 추구되었으며, 전반적인 시장 개방화의 일환으로써 수입자유화가 가속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WTO, OECD 및 APEC 가입으로 인해 국내의 각종 제도와 정책을 국제규범에 일치시키고, 서비스분야, 직접투자 등 시장개방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다자간 협력체제를 통한 통상문제의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

둘째, 한국 통상정책의 특징 중 하나는 다른 국가와 같이 행정부, 정당 그리고 이익집단이 정책결정에 개입하고 있으나, 정책결정에 있어서 대체로 행정부의 역할이 매우 강하며, 상대적으로 입법부는 미약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의 의회중심형 통상정책 결정과 아주 상이하다 할 수 있다. 1998년 이후 통상관련분야는 통상산업부에서 외교통상부로 그 업무가 이전됨에 따라, 사실상 현재는 외교통상형으로 전환되었다.

셋째, 한국의 통상정책은 선진국의 공세적 통상압박에 대응한 방어적 통상정책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통상정책은 미국과의 통상관계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아 왔다. 미국 의존형 안보정책과 90년대 초까지 한국의 무역구조, 특히 대미 수출의존도 심화 및 무역흑자로 인하여 미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국내 시장 개방요구, 교역규모 불균형 개선 등의 통상압력을 강화시켰으며, 한국의 통상정책은 미국과의 불필요한 통상마찰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한국은 또한 EU, 일본 등 선진국의 통상공세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방어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지역간, 다자간 협상의 적극적 참여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 대미 수출의존도의 감소, 국내시장개방 확대, 무역불균형 해소, 그리고 WTO 체제의 출범 및 APEC, OECD의 가입에 따른 지역적, 다자간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WTO를 통한 다자간 통상분쟁의 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축적한 통상분쟁 해결 지식 및 경험 등으로 과거의 순용식 통상관계 및 정책의 수립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 통상정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3. 한국 통상정책 수단의 특징

한국의 통상정책수단은 타국에 비해 특별한 것은 없으며, 최근 WTO 체제의 출범에 따라 국제수준에 맞게 많이 정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수입에 있어서 약간의 품목에 대한 수량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입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³⁵⁾ 원산지규정도 현재 WTO 및 국제관세기구(WCO)에서 추진중에 있는 원산지규정 제정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정부조달협정 역시 한국은 UR 정부조달협정 확장 협상에 참가하여 최종 양허안을 제출하였으며, 1994년 4월 협정에 가입함에 따라 1997년부터 본 협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리고 반덤핑법, 세이프가드, 보조금, 상계조치 등의

35) 일례로 UR 관세협상을 통하여 한국은 WTO에 상당폭의 관세양허를 하였다. 통관절차도 1996년부터 수입면허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의 물품은 검사 없이 통관되도록 하고 있다.

공정 및 불공정무역 관련 제도, 외국인 직접투자 및 서비스시장 관련 제도 등도 최근 대폭 정비되었다.³⁶⁾ 이러한 통상관련제도의 정비는 WTO, OECD 등의 다자간 협상, 선진국, 특히 미국의 통상압력, 그리고 IMF 체제하의 외자조달의 원활화 등의 요인에 의해 추후 진전될 것이다.

한국 통상정책수단의 특징으로 불공정 무역규제의 도입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대외무역법 제4조에 의하면 외국의 불공정무역에 대하여 물품의 수출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무역의 유형으로서는 '교역상 대국이 국제협정에서 정한 우리 나라의 권익을 부인할 때',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제한을 가할 때', 그리고 '인간의 건강과 안전, 동식물의 건강, 환경보전 또는 국내자원보호를 위해 필요한 때'라고 명시하고 있다.³⁷⁾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미국 통상법 301조와 같이 일방적인 보복수단으로서의 사용은 없으며, 상황변화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VI. 결론

본 논문은 미국, EU, 일본 한국의 최근 통상정책의 특징과 통상수단의 차이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각국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통상정책의 기본목표는 미국의 경제이익을 최대한 확보이고 이를 위해 해외시장 개방압력의 강화, 수출촉진 정책의 추구, 통상협정 이행 감시정책의 추구,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확대, 수퍼 301조 등의 일방적 무역정책수단의 사용, 신통상의제 해결을 위한 뉴라운드 추진, 그리고 다자주의, 지역주의, 쌍무주의를 동시에 병행하여 추진하는 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무역과 연계된 환경, 투자, 노동기준, 경쟁정책, 전자상거래, 정부조달의 투명성 등의 새로운 통상의제들을 다자간 통상협상에서 국제규범을 마련함으로써 미국의 의지대로 통상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21세기에도 미국주도의 국제통상질서의 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은 또한 최근 통상정책 수단 사용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1980년대와는 달리 1990년대 이후 WTO 규범하에 인정되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원산지규정 강화 등의 수입규제를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통상정책 수단 중 가장 큰 특징은 국내법의 적용에 의해 외국시장 개방을 위해서 일반 301조, 수퍼 301조, 스페셜 301조와 같은 일방적 무역규제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 무역규제수단인 일련의 301조는 국제통상규범에 위반된다는 비판이 있다.

EU 통상정책의 특징은 공동통상정책의 시행, 다양한 특혜무역협정과 차별적 역외무역정

36) 해외직접투자는 1996년 6월부터는 업종별 투자제한을 전면 철폐하였으며 투자절차에 대해서도 관련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지속적인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고, 외국인 직접투자도 개방업종을 추가 또는 조기 개방하는 등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자유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비스시장 관련 제도도 2000년에는 14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있어서의 외국인 투자가 자유화되어 2000년도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투자 자유화율은 97.2%에 달할 예정이다.

37) 서정두 (1996) pp. 319-320.

책 수행, 비관세장벽의 선호, 지역협력체와의 협력 강화, 상호주의의 강조 등이다. EU는 관세장벽보다는 반덤핑제도, 까다로운 원산지규정의 적용, 수입수량조치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활용하고 있다. EU 통상정책수단 중에서 역외국가들의 불공정 무역에 보다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목적으로 미국의 통상법 301조와 유사한 무역장벽수단(TBI)이 있다. 그러나 특정조치의 채택은 국제규범의 절차를 거친 후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일방적이 조치가 가능한 미국의 301조와 차별된다고 할 수 있다.

일본 통상정책의 특징은 전문관료 중심의 통상정책결정, 긴밀한 민관협력체제의 구축, 산업정책 우위의 통상정책 추진, 다양한 비관세 장벽 및 구조적 무역장벽 유지, 다자주의를 통한 문제 해결 등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통상정책은 일본의 산업정책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일본은 전후 산업의 부흥을 위한 경제자립기반의 확보라는 목표에 의해 강력한 수출지원과 수입억제정책을 구축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 일본통상정책의 기본이 되었으며, 일본 국내시장의 폐쇄성을 형성해온 주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통상정책 수단면에서 미국과 EU는 주로 가격 메카니즘을 이용한 수입규제를 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 직접적인 양적 수입규제방식을 취하는 동시에 행정지도, 엄격한 규격 및 검사제도, 기준, 인증제도, 정부조달의 차별 등의 간접적인 수입규제를 통해서 효율적인 수입장벽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일본통상정책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통상정책의 특징은 시기별로 다른데, 이는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통상정책을 변경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통상정책은 그동안 대외지향적 무역구조에 연관이 있으며, 미국과의 통상관계에 주로 의존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WTO 출범과 함께 적극적인 다자간 협력을 모색하고 있고, 통상관련 제도는 다자간 체제의 출범에 따라 국제수준에 맞게 정비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국은 최근 지역주의의 확산, WTO 체제의 출범 등으로 인해 다자간, 지역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통상정책 성격면에서는 미국과 EU는 공격적인데 비하여, 일본은 이중적 특성으로 선진국에 대해서는 방어적이며, 신흥공업국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면을 나타내며, 한국은 대체적으로 방어적인 통상정책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일국의 통상정책방향은 내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계속 수정·발전되며, 중·후진국은 특히 선진국의 통상정책방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또한 각국의 통상정책은 최근 다양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각국의 통상정책과 제도에 기인하며, 향후 통상정책 결정구조 및 협상의 차이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강인수 외 7인 (1988), "국제통상론", 박영사.

- 김기수 (1996), "미국 통상 정책의 이해", 세종연구소 연구총서 96-08.
- _____ (1999), "한·미 통상관계의 정치경제적 추이", 세종연구소 연구논문 99-02.
- 김동현, 이승철 (1996), "유럽연합의 현황과 전망", 집문당.
- 김영생, 이종원 (1997), "국제무역통상개론", 법경사.
- 대한상공회의소 (1999),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통상전략", 심포지움 자료.
- 미국학연구소 (1995), "미국의 통상정책 통상정책 결정과정", 서울대 출판부.
- 박성훈 (1997), "EU의 대아시아 통상정책과 한-EU 통상관계", 법무부, 통상법률, 제16호, pp. 55~79.
- 박종수 (1997), "국제통상원론", 박영사.
- 배용호 (1997), "미국 통상정책의 결과과정과 최근동향", 국회도서관, 국제문제분석 제33호, pp. 1~36.
- 법무부 (1996), "미국 통상법 연구", 법무부.
- 변재용 (1997), "미국의 신통상정책과 우리의 대응", 표현문화 제3호. pp. 14-21.
- _____ (1998), "Implications of European Union Commercial Policy",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제11권 제4호, pp. 21-40
- 서정두 (1996), "국제통상법", 삼영사.
- 손찬현 (1996),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변화와 대미 통상정책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 96-11, pp. 1~12.
- 왕윤종 (1997), "미국 클린턴 제2기 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7-01.
- 외교통상부 (1999), "뉴라운드와 21세기 한국의 통상정책", 99 정책토론회 자료.
- 윤기관 외 4인 (1996), "국제통상의 이해", 법문사.
- 윤식, 조윤태 (1993),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 산업연구원.
- 이순재 (1998), "한국의 對 EU무역정책",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통권 제7호, p.197~223.
- 이종훈 (1996), "일본경제정책론", 중앙대학교 출판부.
- 이호철 (1996a), "일본경제와 통상정책", 삼성경제연구소.
- _____ (1996b), "미국과 일본의 통상결정 과정", 법무부, 통상법률, 제12호, pp. 136~157.
- 재정공론사 (1996), "클린턴 행정부의 통상정책방향", 재정, 통권 432호, pp. 27~39.
- 정문종 (1994), "미국의 통상 정책과 수퍼 301조: 위장된 공정 무역", 국회도서관, 국제문제 분석 제6호, pp. 1~22.
- 정의광 (1998), "EU의 대외통상정책", 경성대학교 무역연구소, 무역평론, 제5집, p. 71~95.
- 채형복 (1998), "EU의 신통상장벽규칙에 관한 고찰",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통권 제8호, pp. 65~86.
- 최 혁 (1997), "한·미 통상관계와 우리의 대응방안", 법무부, 통상법률, 제16호, pp. 7-22.

- 홍성화, 정영진 (1997a), "WTO 체제하의 EU의 개정반덤핑법(상)", 법무부, 통상법률, 제15호, pp 5-38.
- _____ (1997b), "WTO 체제하의 EU의 개정반덤핑법(하)", 법무부, 통상법률, 제16호, pp 103-131.

2. 외국문헌

- Balassa, B. (1989), "Europe 1992 and Its Possible Implications for Non-Member Countries", in Schott, J. J. (ed.), *Free Trade Areas and US Trade Policy*, Washingt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Bhagwati, J. N. (1988), "Protectionism", Cambridge, The MIT Press.
- Cohen, S. D., Paul, J. R., and Becker, R. A. (1996), "Fundamentals of U.S. Foreign Trade Policy", Westview.
- Czinkota, M. R. (1985), "U.S. Trade Policy and Congress", *The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Vol 20 No. 4, pp. 71-77.
- EC Commission (1988a), "The Economics of 1992", *European Economy*, No. 35.
- _____ (1988b), "Europe a World Partner: The External Dimension of the Single Market", *Bulleti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1(10) (No. Bull, EC10-1988), pp. 10-12.
- _____, Various issues of "The Official Journals".
- GATT (1990), "Trade Policy Review: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989", Geneva.
- _____ (1994), "Trade Policy Review: United States", June, Vol. II, Geneva.
- Hufbauer, G. (1990), "Europe 1992: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The Brookings Review*, 8, pp. 13-22.
- Laird, S. and Yeats, A. (1990), "Trends in Non-tariff Barriers of Developed Countries", 1966-1986. *Weltwirtschaftliches Archiv*, 126(2), pp. 299-325.
- Lincoln, E. J. (1990), "Japan's Unequal Trade", Washington: The Brookings Institution.
- Nogues, J. J., Olechowski, A. and Winters, L. A. (1986), "The Extent of Non-Tariff Barriers to Industrial Countries' Imports",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1(1), pp. 181-99.
- Salvatore, D. (ed.) (1993), "Protectionism and World Welfar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ott, J. J. (ed.) (1989), "Free Trade Areas and US Trade Policy", Washingt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_____ (1990), "Uruguay Round: What Can be Achieved ?" in Schott, J. J. (ed.),

Completing the Uruguay Round: A Results-Oriented Approach to the GATT Trade Negotiations, Washingt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Vermulst, E. A. (1990), "European Community Rules of Origin as Commercial Policy Instruments ?", *Journal of World Trade*, 24(3), pp. 55-99.

WTO (1997a), "Trade Policy Review: European Union", Geneva: WTO.

____ (1997b), "Trade Policy Review: U.S.A", Geneva: WTO.

3. 인터넷 자료

<http://www.mofat.go.kr/main.top.html> "일본 99년도 경제전망 및 통상정책 방향",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main.top.html> "중장기 통상정책", 외교통상부, 1998. 12.

<http://mwus.mokwon.ac.kr/~kycha77/study/wtounfairp.html> "주요 선진국 무역규제 불공성에 관한 연구", 한홍렬, 1996. 12.

<http://www.mk.co.kr/cgi-bin/Rader...+1+10011+0917428773019+2+MEET1999> "슈퍼301조 부활 배경, 파장: 미, 눈덩이 무역적자 덜어내기", 매일경제.

<http://www.mk.co.kr/cgi-bin/Rader...+1+10013+0937811776006+2+MEET1999> "뉴라운드와 21세기 한국의 통상정책 토론회", 매일경제.